월요광장

게임이론으로 바라본 사회

이 상 면
광주대 교수

게임이론은 전략적인 상호작용 및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게임이론의 유명한 사례의 하나인 '죄수의 딜레마'는 협력적인 선택이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으로 인해 서로에게 나쁜 결과를 야기하는 현상을 말해 준다.

범죄 용의자로 A와 B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인이라는 대체적인 증거를 잡고 있지만 결정적인 자백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을 격리시킨 다음, 침묵하는 사람에겐 징역 3년 형을 주고 자백하면 무죄로 석방하겠다고 제안한다. 자백하지 않으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각각 징역 1년 형이 되고, 모두 자백하면 각각 징역 2년 형을 받게 된다.

이 게임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기는 배신하여 자백하는 것이 이익이다. 즉 B가 침묵할 경우 A가 자백하면 석방되고, A도 침묵하면 1년 형을 산다. B가 자백할 경우 A도 자백하면 2년 형을 살지만, 침묵하면 혼자 3년 형을 살게 된다. B의 선택에 관계없이 A는 자백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자백하게 된다.

모두 최대의 자기 이익을 위해 친구를 배신하는 선택을 하면서 가장 큰 손실인 총 징역 4년을 치른다. 서로 신뢰하였다면 자신만 무죄가 될 수 있는 유혹을 버리고, 침묵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두 사람 모두 1년 형을 받게 되지만, 결국은 불신으로 인해 총 2년이라는 비용을 더 치르게 된다.

한국의 큰 사회문제인 사교육이 대표적인 죄수의 딜레마다. 과외로 더 많이 공부한다고 서울대 정원이 느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과외를 하는데 내 아이만 안 시키면 뒤처지니 시키고, 상대방이 안하면 내 아이만 시켜서 성적을 올리려고 시킨다. 그래서 무조건 과외를 시키게 된다.

또 하나의 나쁜 게임으로 '치킨 게임'이 있다. 예를 들어 서로를 향해 차를 몰다가 먼저 핸들을 돌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이 게임을 매-비둘기 게임이라 하는데, 매는 돌진하는 미친놈이고, 비둘기는 도망가는 겁쟁이다. 둘이 만나면 언제나 매가 이기고, 매와 매가 만나면 공멸한다.

서로를 향해 차를 모는 경우 모두 핸들을 돌리지 않으면 둘 다 죽고, 둘 모두 핸들을 돌리면 겁쟁이는 되지만 목숨은 건지게 되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핸들을 돌리고, 다른 사람은 돌리지 않는 경우 한 사람은 게임에서 이기지만 다른 사람은 겁쟁이가 되고 만다.

이 게임은 '미친놈 게임'이다. 남이 협력하면 배신하고, 배신하면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방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득이며, 어떤 선택을 하든지 최선의 전략이 없다. 여기서는 미친놈이 이긴다. 치키게임에서 이기려면 자신이 미친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 정치판, 남북문제 등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된다.

한편 '사슴사냥 게임'은 협동지향적이다. 사슴을 잡기 위해서는 두 사냥꾼이 협동하여 자신이 맡은 길목을 지켜야 한다. 토끼는 혼자서도 사냥할 수 있으나, 둘이서 사슴을 사냥해 나누는 이득이 토끼사냥보다 훨씬 크다.

두 사람이 사슴사냥을 약속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마침 옆으로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간다. 둘 모두 약속대로 길목을 지키면 사슴을 사냥하게 되지만, 한 사람이 배신하여 토끼를 좇아 갈 경우 배신한 사람은 토끼를 얻지만 신의를 지킨 사람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둘 모두 배반하면 토끼를 사냥하게 된다. 결국 상대방이 협동하면 나도 협동하고, 배신하면 같이 배신하는 것이 유리하다.

죄수의 딜레마나 치킨 게임을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꾸어야 한다. 적어도 개인의 탐욕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결과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상황을 사슴사냥 게임으로 만드는 정책개선, 협동이 행복을 창출하는 환경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죄수의 딜레마나 치킨게임에선 개인에게는 최선이지만 사회에게는 손실이다. 아담스미스의 '개인의 최선은 전체의 최선이다' 는 말은 맞지 않다. 시장 효율성,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이기적인 행동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이기적 인간의 전제 하의 시장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경제학, 사회 운영원리를 찾아야 한다. 이기심과 효율성이라는 주류경제학의 전제를 벗어나 협동, 신뢰와 호혜의 사회적경제 교육이 시급한 이유다. 지금 한국의 학생들은 이런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고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경쟁에만 내몰리고 있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교감이 필요하다. 경제도 어려운데 불신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다.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 있어야 소통을 통한 구성원 간 합의, 약속이 가능하고, 이기적 행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도 차단할 수 있다.

법조칼럼

개인 회생에서 알아야 할 두 가지 원칙

권 노 을
광주지법 판사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개인회생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이후 이용자들이 꾸준히 증가해 왔고, 작년에는 전국 법원에 무려 11만 건이 접수되어 개인파산사건보다 2배가 넘게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현재의 직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면책을 받을 수 있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파산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제도에 비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과정이나 인가의 요건 등을 잘 알지 못하여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를 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가 작성한 서류들을 심사하여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은 '청산가치 보장원칙'과 '가용소득 제공원칙'이 지켜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파산제도와의 선택 관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입니다. 청산가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말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로 하여금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요건과 관련해서는 간혹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숨기거나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전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까운 친척 또는 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회복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에 더하여 청산가치를 계산하면 기존의 변제예정액으로는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부족한 액수만큼을 더 변제하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은 인가될 수 없습니다.

'가용소득 제공원칙'은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의 가용소득 전액이 채권에 대한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장래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비, 필수적인 영업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과 관련해서는 채무자가 소득액수를 줄여서 신고하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소득에 관한 자료는 장래의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즉 개인회생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자체를 심사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확실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채권자들은 특별히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할 채권이 아닌 이상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변제를 받게 됩니다.

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꼼꼼이 읽어 보고 먼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자신의 채권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틀린 내용이 있다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을 잘 살펴 문제가 있다면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내용을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재판부에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기 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지산유원지 활성화

양 혜 령
백화포럼 공동대표

1978년 4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큰 기대 속에 문을 연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는 당시 별다른 유흥 시설이 없던 지역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승용차 등 교통 수단이 많지 않던 시절에 광주 도심으로부터 걸어서 30분 이내에 위치한 지산유원지는 지역 주민들의 '힐링 센터'였다.

일상에 지친 시민들은 지산유원지를 찾아 피로를 풀고 온천에서 건강을 챙겼다. 신혼여행객들도 넘쳐났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도 각광을 받았다. 무등산 자락의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이고 쾌적한 자연 환경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이다. 광주의 대표 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지산유원지'다.

그러나 지산유원지는 20여 년째 잠들어 있다. 1994년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호텔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유원지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 동안 지역의 행정 기관과 정치권 등이 지산유원지에 대한 다양한 개발 정책을 제시했지만 법적·제도적 제약 때문에 사업 주체로 나서야 할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려웠다.

지산유원지를 재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은 높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중구난방(衆口難防)에 그칠 뿐이었다. 필자가 공동 대표로 있는 '백화(百和)포럼'에서 지난 주, '아시아문화전당과 지산유원지 활성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주민들과 학계, 그리고 시와 구의 의견을 종합하여 광주와 동구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찾고자 하는 의도였다.

이번 포럼에서 현지 주민들의 첫 번째 요구 사항은 '지산유원지 주변의 도시계획 변경'이었다. 표고 100m 초과, 경사도 10° 이상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은 경남 남해군의 '원예예술촌' 개발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곳은 지산유원지보다 조건이 열악하지만 단체장의 결단으로 개발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둘째는 '지산유원지 일원에 대한 접근성의 증진'이다. 현재 제 2순환도로에서 지산유원지 쪽으로 진출로를 개설하면 지산유원지 뿐만아니라 광주 도심에 대한 접근성도 훨씬 나아질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산유원지로의 진출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지산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무등산권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지산유원지를 둘러싸고 있는 향로봉, 깃대봉, 장원봉 등의 산봉우리는 등산객의 사랑을 받는 산행지로 유명하다. 이런 천혜의 환경과 지산유원지가 접목된다면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이 광주 관광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산유원지 아래쪽에서 향로봉까지 올라가는 현재의 리프트카를 활용해 그 종점에서부터 무등산 중머리재나 장불재 등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찾는 관광객들의 연계 관광 코스로 매우 유익하다고 본다. 케이블카 설치는 지리산 국립공원 등 전국 각지의 명산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무등산도 여건이 좋은 편이다.

넷째, 아시아문화전당 및 무등산 증심사 지구와 연계한 '삼각벨트' 전략의 일환으로 지산유원지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이 세 곳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의향(義鄕)·예향(藝鄕)·미향(味鄕)'이라는 광주의 참 모습이 부각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심사 지구에서 지산유원지 방향으로 터널을 뚫거나,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수많은 산복도로(山腹道路)처럼 저렴한 예산으로 통행 구간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5분 이내로 두 지역이 연결된다면 또 다른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현재로서 지산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비전은 이러한 사회간접시설이 먼저 충족돼야만 실현 가능하다. 특히 아시아 문화전당이 개관하는 올 9월이 되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점검하여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발전 전략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문재인 대표 이제 '백의종군' 고민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궤도 이탈'이 점입가경이다.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공격에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하고 퇴장하면서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게다가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 와중에 '봄날은 간다'는 노래를 불러 '봉숭아 학당'이 아니냐는 비난마저 쏟아졌다.

이날 사태는 평소에도 직설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 최고위원이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주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독설을 퍼부은 것이 발단이 됐다. 주 최고위원은 이에 "치욕적"이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독설에, 노래까지 회의장이 엉망이 되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야당'의 현주소를 생생히 보여준 것이다.

현재 정 최고위원은 문 대표의 사과 요청에도 버티고 있으며, 주 최고위원은 지역구인 여수에서 칩거 상태에 있어 뒷수습마저 어려운 형편이다.

당이 혼돈과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 크다. 재보선 참패의 충격을 딛고, 당을 추슬러야 할 문 대표는 책임론을 외면한 채 진정성 없는 자세와 유체 이탈 화법으로 일관해 왔다. 특히 문 대표는 재보선 패배의 화근인 친노 패권주의 청산 등에 대한 소신도 없이 광주행을 감행, 오히려 호남 민심을 자극하는 데 일조를 했다.

지금 동교동계를 비롯한 비노 측 인사들이 문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당의 혼란 수습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전제는 문 대표의 거취와 함께 친노 청산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얘기다. 7일 비노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이제 문 대표는 '백의종군'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당의 환골탈태를 위한 '물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풀어 지방 아주 죽일 셈인가

대한민국이 '수도권 공화국'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수도권규제 법령이 제정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심각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 총량제 적용 배제' 등을 수도권 규제 완화 4대 과제라며 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44년 만에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수도권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14개 시·도는 최근 손을 맞잡고 우선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1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기업들이 굳이 지역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진다. 특히 수도권 유턴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해 주겠다니 어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겠는가. 지방은 가만히 앉아서 고사(枯死)되기 딱 알맞다.

마침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전남지역 생산유발 효과가 최대 2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전남발전연구원)가 나왔다. 취업유발 효과도 최대 1만2000명 이상 줄어든다. 따라서 늘 나오는 얘기이지만 낙후지역 우선 재원 배분이나, 지역 활성화 지역 선정 등 지역별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렇게 균형발전을 소리 높여 외치더니 이제 와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서야 말이 되는가.

無 等 鼓

신은 어디에

인류가 지구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 죽어갔다. 평온한 세상에서야 나이 들어, 또는 지병으로 죽어 땅에 묻히는 경우가 정상이고 또,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과 천재지변이 등장해 왔고 수천, 수만 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땅에는 피가 강처럼 흐르고, 살과 뼈가 산을 이루었을 게다. 유족들의 비통한 눈물과 한숨에 하늘의 신들도 고개를 돌렸을 테고.

'신(神)들의 나라' 네팔이 지진으로 신음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취약한 인프라 때문에 사망자가 2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라서 멱살 잡고 하소연할 곳은 없다지만 그렇다고 죽은 이의 한과 살아남은 이의 눈물이 줄어들지는 않을 터다. 오순도순 의지하며 살아가던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아들딸, 친지들의 차가운 시신을 폭삭 주저앉은 건물더미 아래에서 찾아내야 하는 이들의 슬픔은 짐작하기도 어렵다.

일부 언론과 네팔 현지에선 '그 많던 신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라는 한숨도 들려오고 있다. 홀로코스트를 비롯해 전쟁통에 빚어진 수많은 대학살과 이름 모를 병원균, 지진과 쓰나미 등 대자연이 몰고 온 떼죽음에서 '믿는 인간을 지켜줘야 했을' 신에 대한 원망일 것이다.

'신이 무엇인지, 신이 존재하는지'와 같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저, 우리가 신들을 필요로 했을 때, 우리에게 행운과 건강을 주리라고 믿었던 신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있기나 한 건지, 그것을 묻고 싶을 뿐일 것이다.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가 이르면 내년 10월께 인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뒤집힌 배를 빠져나오지 못한 295명이 숨졌고 9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다. 죽은 이는 말이 없으니 슬픔과 고통, 원망과 외로움은 오롯이 남은 이들의 것일 터.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부모·형제를 찾을 때 '신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있었기나 한 건지' 유족들은 가슴을 치며 지금도 묻고 또 묻고 있을 것이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